

특별
증면호

4호 2008년 9월 8일

주간〈맞불〉의 새 이름

저항의 촛불

www.resistcandle.com

반전 | 반신자유주의 | 노동자 투쟁

The Candlelight Resistance

‘다함께’(www.alltogether.or.kr)의 주간신문 〈저항의 촛불〉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atgmail@nate.com

값 800원

이명박의
‘9월 위기’
대책 —

부자에게
75조 원
감세

서민에게
물가
폭탄



1987년 6월항쟁과
2008년 촛불항쟁,
무엇이 달라졌나

8~10면

‘9월 위기설’과 친재벌 대책

4면



부시의 수령,
아프가니스탄의 어제와 오늘

12~13면

알렉스 칼리니코스 논평 —
체제의 규칙을 따르는 오바마

13면



국가보안법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

— 이번 탄압이 드러낸 교훈
— 사노련 인터뷰

5, 16면

‘여간첩 사건’이 보여 준 것

6면

타이 정치 위기의 진실

7면

〈저항의 촛불〉 웹사이트를
http://www.
resistcandle.com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사악한 조선, 교활한 중앙, 무식한 동아”

－ 향간에 떠도는 촌철살인 언론 논평

“(한자) 문맹률이 60퍼센트의 국민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 이번 광우난동사태는 한자 문맹자들의 반동이었다”

－ 언제나 ‘신선한’ 시각을 가진 조갑제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

－ 자유기업원의 해괴한 감세 환영 논리

“이명박은 후쿠다에게 배워라.”

－ 일본 총리 후쿠다의

사임 발표 소식에 대한 네티즌 댓글

“대한민국 영업방해와 하위사실 유포로 검찰은 [타임스]를 구속하고 여청수는 체포조 투입해라. 그리고 방통위는 사이트 폐쇄시켜라 참, 그리고 영국 간첩들도 색출하라. 미모의 영국여자 간첩이 있을 것이닷!!”

“[**타임스**] 배후를 조사하라고 청와대 서 난리칠 것”

－ **타임스**의 ‘9월 위기설’에 대한

정부 반박을 비꼰 네티즌들

“경찰이 이렇게 부실하고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질타하는

사노련 ‘부실 마녀사냥’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한선교 :

“17대 국회 때 본회의장에서 투표하는 시간에 뒷자리에 앉은 이한구 의원과 엄호성 전 의원이 자넷 리의 가슴이 인공이나 자연이나 하는 논쟁을 했다”

－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는 일

부자 세금 깎지 말고 서민 복지를 늘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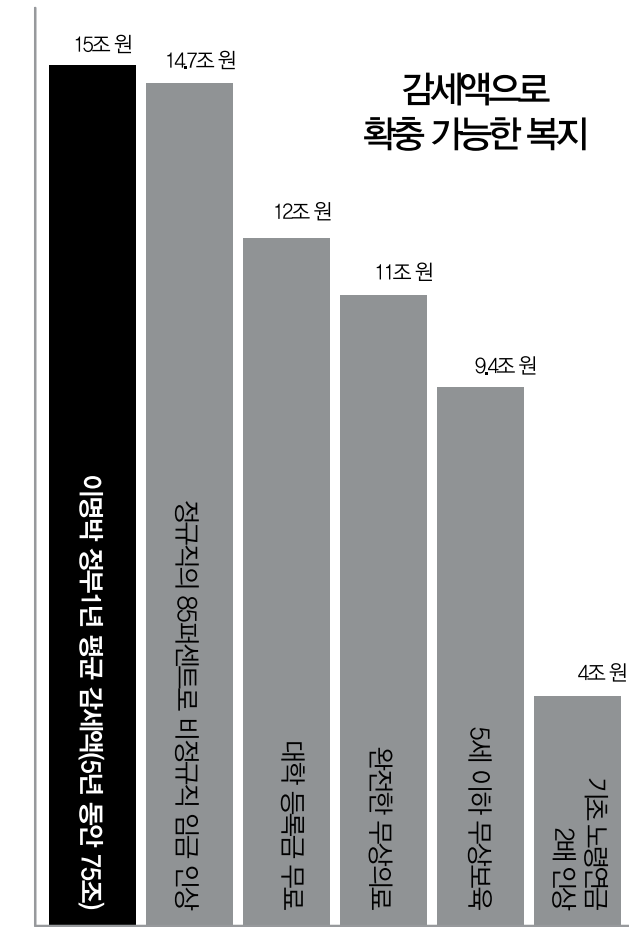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을 위한 대폭적 감세안을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이명박 정부 내에만 무려 75조 원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으로 연간급여가 2천만 원인 노동자의 세금은 5만 원 줄어드는 반면 이견희 같은 부자의 세금은 수억 원이 줄어든다.

법인세 인하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에 법인세를 5퍼센트 인하하기로 했는데, 예컨대 삼성전자 1년 순이익이 10조 원이면(삼성전자 2007년 순이익은 7조 4천2백10억 원) 연 5천억 원 감면받게 된다. 전체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으로 약 9조 원의 이익을 챙긴다. 즉, 정몽구·이건희 등 상위 1퍼센트 부자와 외국계 기업이 세금 감면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다.

수혜자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도 부자들의 편법 증여를 합법화할 뿐이다. 연평균 사망자 30만 명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10억 이상 재산가)은 2천 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완



화도 고소득 재산가들만 해당사항이 있으므로 서민과 무관하다.

단지 유류세 감면만이 노동자·서민에게도 유리한데, 2008년 1회만 해당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생색내기만한 꼴이다.

감세액으로 확충 가능한 복지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가 감세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는 18만 명이나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세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집중된 나머지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선일보>

조차 이번 감세가 “경제 활성화보다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유세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반대해 서민을 위한 부가가치세 3퍼센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가 일시적(1년 3개월)으로만 이루어지고 원상회복되는 것이므로 서민에게 별 효과가 없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부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줬던 경력을 기억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 발표는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감세안은 ‘정부의 지출을 줄이라’는 압력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미 보수 언론은 감세안 발표와 함께 정부의 지출을 줄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야 한다. 또 민주노동당 등이 주장해 온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노동자·서민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

권오현

‘촛불 사회자’ 정보선 씨를 석방하라

조계사 ‘촛불수배자’ 중 한 사람인 정보선 새시대예술연합 단장이 지난 9월 3일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정보선 씨가 허리 지병 치료를 받으려 농성장을 나온 틈을 타 붙잡아 갔다. 정보선 씨가 8월 27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다

가 퇴원한 바로 다음날 자택에서 연행한 것이다.

정보선 씨는 지난 5월 촛불집회에서 두 차례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조계사 농성에 합류한 이후 고생스런 천막생활 때문에 건강이 악화했다.

다른 ‘촛불수배자’ 7명 역시 무더위와 장마 속에 두 달째 고된 농성을 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선 씨 체포 외에도 아고라 네티즌 구속 등 촛불 운동에 주도적이었던 이들을 속죄양 삼아 촛불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정보선 씨 석방을 촉구하며 밝혔듯 이명박의 “온갖 민생파탄 정책”이 촛불 저항을 불렀고,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 저항도 계속될 것”이다. 정보선 씨는 무죄다. 정보선 씨를 당장 석방하라.

송주

“사회적 불평등이 대량 학살을 낳는다”

최규진
서울의대 의과학 석사과정

8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세대 동안 불평등 해소하기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개입해 건강 평등 실현하기’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독립전문가 19명이 광범한 연구를 거쳐 만들어졌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촌인 렌지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28년이나 일찍 죽는다. 미국 워싱턴에 사는 흑인은 몽고메리카운티의 백인보다 17년이나 일찍 죽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산업재해로 죽을 확률이 두세 배 높다.

세밀한 분석과 구체적인 예시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나쁜 정책과 나쁜 경제, 나쁜 정치가 서로 악랄하게 결합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건강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 건강을 지키려면 의료만큼은 시장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남아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동 원칙

보고서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권을 누리는 방법임을 보여 준다.

연구자들은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 가지 행동 원칙을 제시한다.

1. 일상 생활 조건 —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일하

고 나이를 먹는 환경 — 을 개선하라.

2. 권력·돈·자원의 분배 — 일상 생활 조건을 구조적으로 결정짓는 요인들 — 가 국제적·일국적·지역적 수준에서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것에 맞서라.

3.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고민해 보고, 기초지식을 확장하고,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들에 관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켜라.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는다. “사회적 불평등이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쪽방에서 여생을 보내는 할머니

순탄치 않은 이명박의 앞날과 18대 국회

전지윤

이명박은 얼마 전 “로켓은 처음 발사될 때 연료의 90퍼센트를 쓰지만 일단 중력의 한계를 돌파해 하늘로 솟구치면 연료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로켓은 엄청난 연료를 쓰고도 아직 대기권 근처도 가지 못했다. 취임 첫 6개월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불도저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금세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것 같던 이명박에 대한 지배자들의 실망은 매우 크다. 최근 세계경영연구원이 CEO 1백18명에게 물은 결과 84퍼센트가 이명박이 “기대 이하”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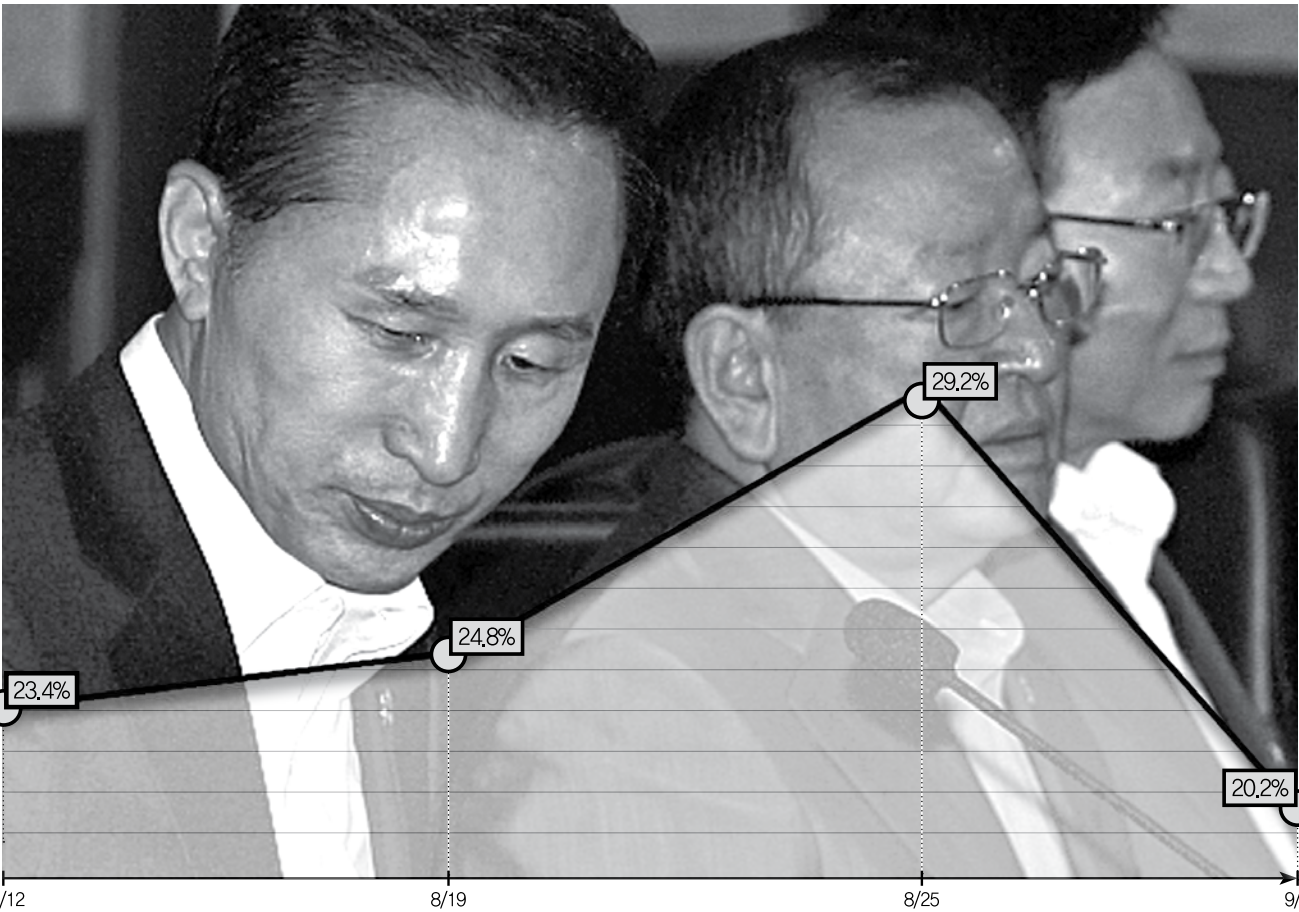
MB맨 김용태도 “이명박 정부가 지난 6개월간 씻기 어려운 역사적 죄를 지었다”며 재벌·강부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했다.

이 때문에 가까스로 구성된 18대 국회 개원을 맞아 이명박의 각오는 남다르다. 이명박은 “MB 리더십이 주눅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 내가 많은 것을 결심하고 행동할 준비가 됐다”며 온갖 친기업 법안 추진 의욕을 불태웠다.

재벌·부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며 돈을 벌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주고, 부동산 투자를 돕는 법안들과 재벌·다국적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인 한미FTA 등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도 못미더운지, ‘몸싸움과 단상점거 금지법’까지 만들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한다. 촛불이 커질 때는 ‘제도권에서 대화로 해결하자’더니, 촛불이 사그라들자 곧바로 제도권(국회)을 개악 추진의 고속도로로 만든 것이다.

이명박은 친기업 정책 추진이 ‘집토끼’



올림픽 거품이 꺼진 후 다시 폭락한 이명박 지지율 — 이래서 개악에 힘이 실릴까?

(전통적 보수층)를 결집시켜 약간 올라간 지지율을 더욱 높일 것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산토끼’(중도층)를 잡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거품

그러나 이명박 지지율은 여전히 노무현 퇴임 직전의 지지율에도 못미치고 있고 “금메달 하나당 1퍼센트씩”이라는 올림픽 효과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서도 절반만이 이명박을 지지하고 있다. 이명박이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반대 여론은 60퍼센트 정도로 찬성보다 높다. 무엇보다 “내(이명박)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너무 많은 기대가” 커다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이런 압력 때문에 한나라당이 나서서 ‘상수도 민간위탁’과 ‘법인세 인하’에 제동을 걸고 어청수 경질을 건의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정몽준이 “진보적 가치를 수용해 나가자”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불도저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대상과 규모가 축소됐고, 부동산 대책

도 투기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중앙일보〉논설위원 김종수는 “쇠고기 촛불집회 이후 …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익집단의 조그만 반발에도 정책이 흔들리고 뒤바뀌기 일쑤”라며 “이명박 정부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한다’는 비난을 받을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재벌·부자들하고만 소통하는 이명박 정부는 이런 위로부터 압력에 따라 18대 국회를 통로 삼아 계속 우회전 질주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민주당은 이명박 불도저의 브레이크가 될 수 없다

이명박이 온갖 개악들을 추진하려 하면서 민주당이 이것을 저지해야 한다거나 민주당과 손잡고 이것을 저지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촛불이 사그라들면서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민주당을 포함하는 ‘반독재 국민전선’을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에서 물고기 구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이명박의 친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가축법 개정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하면서 18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계기로 타오른 촛불을 배신한 것이다.

민주당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마녀사냥을 비난하는

것도 위선이다.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과 야합해 국가보안법을 살려 둔 장본인이 민주당(당시 열우당)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소위 ‘일심회’ 마녀사냥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이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한미FTA도 바로 노무현과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이명박 밑에서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은 노무현 밑에서 한미FTA를 추진한 자고, 지금 촛불을 짓밟고 있는 어청수는 노무현 밑에서 부산경찰청장으로 APEC 반대 시위 폭력 진압을 주도한 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같은 ‘야당’이 아니다. 한미FTA,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악법 등을 추진한 당과 그것에 반대해 투쟁한 당이 같을 수 없다. 기업주들의 돈·인력에 기반해

운영되는 당과 노동조합·피억압 민중에 기반해 운영되는 당이 같을 수 없다.

17대 국회의 쓰디쓴 교훈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열우당과 ‘개혁공조’를 추진했다가 몇 차례나 배신당했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열우당과 동반하락하고, 그 틈에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득세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쓰디쓴 교훈

결국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으로 채워진 18대 국회는 노동자·서민의 염원을 짓밟는 구실만 할 것이다. 18대 초선의원들의 평균 재산도 17대에 비해 3배나 늘어났다.

이렇게 제도권(국회)이 개악 추진의 통로가 될수록 사람들은 다시 ‘거리의

정치’로 기울게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이명박 정부는 집회 주최자에게 상인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법안, 복면 착용 금지법, 불법시위 처벌 강화와 벌금액 인상, 사이버모욕죄 등 ‘거리의 정치’를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온갖 반(反)촛불 법안들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권의 친재벌 정책, 반민주주의 정책, 전쟁 지원 정책에 맞서는 민주당과는 독립적인 정치적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이명박의 재벌·대기업 기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 건설과 연결돼야 한다.

이명박과 그의 미친 정책들을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이런 방향으로 힘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주장과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9월 위기설’은 현실이 될 것인가

강동훈

9월 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9월 위기설’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9월에 만기가 되는 외국인 보유 채권 67억 1천만 달러를 외국인들이 일시에 매도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 ‘9월 위기설’이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우선 전 세계적인 ‘신용 경색’의 여파가 한국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계경제 위기의 진원인 미국에서는 9월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미국 주요 은행들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9백50억 달러에 이르는 채권의 만기에 맞춰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세계 금융기관들은 이미 5천억 달러의 손실을 봤고, 앞으로 이 손실액은 2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은 현금을 얻을 수 있는 해외 투자자금을 모조리 되찾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올해에만 한국 주식 25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해 달러로 바꾸고 있다.

한국 지배자들은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자율화를 적극 추진해 왔는데, 이 덕분에 높아진 외국인 투자 비중이 금융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단기 외채가 급증해, 만기가 1년도 안 남은 채권이 2천1백56억 달러로 현재 외환보유액 2천4백32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돼 투기를 부추겨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실물 경제 위기 확대

이런 외환위기는 실물 경제 위기 확대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세계경제 위기로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해 준 수출마저 축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올 4분기에 성장률이 0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올림픽 이후 투자와 소비가 가라앉고 물가가 치솟고 있다. 일본과 유럽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이런 경기 악화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등 주요 수출품들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3~28퍼센트 감소한 반면, 석유·석탄·가스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 8월까지 1백16억 달러가량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수출 증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석유·곡물 가격만 끌어올려 물가 상승만 부채질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주로 재벌 계열사들인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부채는 1년 6개월 만에 35퍼센트나 늘었고, 어지간한 건설업체들조차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하기 시작하자, 올 상반기까지 금융회사를 제외한 1백대 상장기업이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 총액이 2백조 원 가까이로 늘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2.3퍼센트나 증가했다.

두산·코오롱·금호아시아나·STX 등의 재벌들은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였는데, 이들은 최근 기업 인수·합병으로 거액을 차입했거나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1997년 경제 위기 때도 한국의 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단기 외채를 끌어 쓰다 갚지 못해 외환위기를 불러왔고, 한보·기아 같은 재벌들이 파산하면서 그 위기의 파장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번 ‘9월 위기’로 드러난 위험들이 꼭 9월에 폭발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위기가 1997년 위기와 흡사하게 터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 말라

경제 위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을 발표하더니 9월 1일에는 대규모 감세를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투자가 증가해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율은 2000년, 2002년, 2005년에 28퍼센트, 27퍼센트, 25퍼센트로 이미 낮아졌지만, 기업 투자는 2005년 이후 계속 정체하거나 줄어들어 왔다.

또, 올해 상반기에도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38조 원이 넘었지만, 이들은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

소득세나 부동산세 삭감도 명백히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재정부는 2005년에 부유층 감세가 “경기부양 대신 정부의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세 삭감과 대운하 재개,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사활적으로 막아보려 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를 낳으며 금융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감세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지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설사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다 해도 거품을 키워 더 큰 위기를 자초할 공산이 크다.

거품

이명박 정부는 이런 미봉책들로 노동자·서민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며 내년 하반기까지만 경제 위기를 지연해 보려는 듯하다. 그 후에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가 내년에 끝날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 없는 낙관일 뿐이고 노동자·서민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정책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조차 “민생 고통의 측면에선 과거 IMF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듯이 서민 경제는 이미 위기에 빠졌다.

밀가루·라면·세제·식용유 등 생필품 11개의 가격은 단 1달 만에 최고 14.5퍼센트 올랐다. 뛰는 사교육비와 높은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크게 삭감됐다.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청년층(15~29세) 미취업자만 71만 명을 넘고 공식적인 청년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만 1백4만여 명에 이른다. 또, 〈서울신문〉이 지난 6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자는 지난해 5월 6백여 명에서 올해 1천50명으로 늘어났다.

재벌·부유층 감세가 아니라 재벌과 부유층에 누진세를 거둬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데 쓰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로 서민들의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서민 고통은 전혀 아랑곳 않고 재벌·부유층만 신경 쓰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때만 얻을 수 있다.

이번 ‘9월 위기’로 드러난

위험들이 꼭 9월에

폭발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 위기가

1997년 위기와 흡사하게

터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이 드러낸 교훈

최미진

지난 8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판사가 보기에도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명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의 심각한 위기 속에 20만 범 불교도 대회까지 예고되고 있던 상황에서 공안당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사건을 터뜨렸음을 짐작케 해 준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은 “[사노련이 친북 단체도 아니고] 국가 변란을 일으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설명을 “담당 판사님이 주의 깊게 들”고(오세철, YTN 라디오 인터뷰) 설득된 결과가 아니다. <중앙일보>는 “경찰의 수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국보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영장이 기각된 배경에는 촛불 운동의 여파가 자리잡고 있다. 사노련 정치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촛불에 참가한 단체가 본보기로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반감을 나타냈다. 사노련 탄압에 반대하는 내용을 주요기사로 실은 <저항의 촛불>은 촛불 시위가 활발했을 때 만큼 거리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노련에 대한 **방어 운동이 신속하고 광범하게 조직됐다**. 바로 이 점이 영장 기각의 핵심 이유다. 체포된 7명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위가 이를 만에 결성됐고 정치적 경향이 서로 다른 진보 단체 활동가 50여 명이 이 회의에 참가했다. 게다가 김수행, 조희연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들도 사노련 탄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노련 탄압에 반대해 이렇게 신속하고 광범한 연대가 형성된 이유는 이번 사



석방된 사노련 활동가들. 사노련에 대한 방어운동이 광범하고 신속하게 결집한 덕분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건이 준 충격 때문인 듯하다. 그동안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우리 운동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일깨워 줬다.

경각심

특히, 사노련 사건은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좌파도 국가보안법 탄압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그 동안 국가보안법 탄압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던 좌파들도 이 사실을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북한을 남한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북한 정권에 일관되게 반대해 온 국제사회주의자들(IS)도 김대중 정부 때까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탄압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 후, <조선일보>는 “과거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문건을 배포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재판에서는 유죄로 판결해 왔다”는 선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북이든 아니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은 모두 처벌 대상”이라며, “친북 아닌 좌파[의] 파과 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보 운동은 국가보안법 탄압이 과거지사라거나 친북 단체들만의 문제일 뿐이라는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사노련 사건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왜 여전히 진보진영 전체의 주요 과제인지 잘 보여 줬다.

국가보안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친북 좌파나 혁명적 좌파라 할지라도, 탄압의 목적은 정부 비판과 반대 운동 전체를 위축시키려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급진 좌파들은 그 동안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에 개입하지 않았던 관성에서 벗어나 탄압의 주된 표적이었던 친북 좌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단체들과 광범한 연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탄압은 진행형

사노련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이 탄압의 끝이라고 여겨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저들은 잠깐 주춤한 것일 뿐이다. 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노련만 탄압의 대상인 것도 아니다. 사노련 활동가들이 체포된 바로 다음날 윤기진 범청학련 의장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전교조 최보경 교사도 사노련 사건이 있기 얼마 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돼 9월 2일 재판을 받았다. 이 밖에도 ‘탈북자 위장 여간첩 사건’, ‘군 내부 간첩 용의자 50명 메모’,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을 제기한 대학생에 대한 국가보안법 기소 등 마녀사냥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마녀사냥

이번 영장 기각 때문에 당분간은 주로 북한과의 연계나 친북을 빌미로 한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마녀사냥은 언제나 우리 운동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다.

‘친북’이 아닌 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교훈을 이끌어내서도 안된다. “한국에서 사회주의자의 ‘공개’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가능성이 확인됐다.”(<참세상> 유영주 기자)는 결론은 선부르다. 한 때 민중당에서 활동하다 우파로 전향한 한나라당 대변인 차명진은 “좌파정부 10년 동안의 보호 속에서 ... 체제전복을 선동했다”며 혁명적 좌파들에 대한 탄압을 벌렸다.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이명박의 제물이 되지 않으려면 진보진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탄압에 반대하는 투쟁을 폭넓게 구축해야 한다.

지난 국가보안법 투쟁에서 돌아볼 점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급진 좌파를 포함한 진보진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인기 종족’이었다.

그것은 소위 김대중·노무현 ‘민주화’ 정권 10년을 거치며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효력이 없어졌다는 안이한 인식 때문이었다.

진보진영 내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마치 국가보안법 탄압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불과 2년 전에 민주노동당을 겨냥한 소위 ‘일심회’ 사건이 있었다. 노무현 임기말에는 레임덕이 심화하면서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소수 ‘친북’적 개인이나 단체만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와도 관계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맞선 운동진영의 공동대응은 그동안 큰 어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탄압은 존재했다.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민주노동당에 타격을 입혔다

움을 겪었고, 국가보안법 구속자들도 광범한 방어를 받지 못했다.

상당수 급진 좌파의 경우에는 작업장

의 경제적 쟁점과 투쟁만을 강조하고 정치적 쟁점과 투쟁에는 소홀한 경향도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서 싸울 필요성을 간과하는 데 한몫했다.

개혁주의자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나 그 당에 의존한 것도 심각한 문제였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유주의 개혁정부와 협력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폐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던 2004년에 열린우리당에 의존하다가 국가보안법을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해 심각한 사기저하를 겪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후보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휘둘렀다. 따라서 앞으로도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투쟁 건설이 중요하다.

이명박의 공세를 위해 사회분위기 냉각시키기

한규한

보수 언론들이 ‘한국판 마타하리’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원정화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혹이 끊이지 않으며 블랙코미디가 되고 있다. 공안기관들이 또 왜곡·과장·조작을 한 듯하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절도 전과 2범 원정화의 “개방적인 성관념”을 높이 사 ‘간첩’으로 발탁해 중국 노래방에 먼저 ‘침투’시켰다. 북한제 정력제를 팔아 스스로 공작금을 마련한 “자립형 간첩”인 원정화가 남한 침투 7년 동안 한 일은 몇몇 하급 장교들의 연락처와 인터넷으로 검색 가능한 군부대 위치 등을 알아낸 것이다. <조선일보>조차 그녀가 “북한에 넘겨준 정보 가운데 국가기밀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할 정도다. 신경쇠약과 겁에 질려 자물쇠를 4개나 달고 사는 여성이 ‘독침 암살’을 계획했다는 것도 황당하다.

기무사는 3년간 그녀를 내사해 왔지만 물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앞뒤가 잘 안 맞고 허풍이 섞인 듯한 그녀의 진술에만 의존했다.

심지어 기무사는 원정화가 간첩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서도 그녀의 안보강연을 중지시키지 않았고, 국정원은 그녀에게 대북 간첩질을 시켰단다.

이런 점들은 그녀가 남과 북 정보기관 모두가 이용한 말단 정보원 수준임을 시사한다.(어쩌면 국정원이 관리하던 정보원을 기무사가 체포해 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수사 결과는 한 편의 코미디지만, 공안기관과 우파들이 이 사건으로 노리는 효과는 공포물이다. 공안당국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간첩 사건들을 만들어 왔지만, 이는 결국 내부 단속으로 이어졌다. 많은 간첩 사건들이 사회 분

위기를 냉각시키는 데 주되게 이용돼 왔다.

이번 사건은 원정화가 체포된 지 4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발표했다. 발표 하루 전에는 사노련 회원들이 체포됐고, 당일에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불교도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었다.

‘적화 야욕’

낮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위기를 반전하고 각종 반동 공세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 비교적 손쉬운 대상으로 원정화를 택했을 수 있다.

국가기구는 더욱 더 권위주의화 할 것이다. 국방부는 ‘군 내에 간첩 용의자 50명과 좌익 전력자 1백70여 명이 있다’며 언론플레이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정부 기

관 내 대규모 간첩 조직이 있다고 공포감을 부추기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 등 억압기구들의 활동을 더 강화하려는 이런 시도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북한이 끔찍한 억압체제임을 보여 줬다. 일부 우익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이 대남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고 호들갑이지만, 원정화 사건의 본질은 오히려 북한 체제 내부 단속에 무게가 있어 보인다.

보위부 소속인 원정화가 수행한 주된 임무는 탈북자 관련 정보 수집과 북한 현지와 연결된 탈북자들의 네트워크 색출인 듯하다. 중국에서도 그녀는 탈북자를 잡아 복송하는 인간사냥꾼 구실을 주로 했다. 그녀가 불쌍해 보이면서도 결코 방어할 수 없는 이유다. 굶주림을 피해 고향을

떠나 떠도는 이탈 주민들을 ‘조국’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추적·박해했던 것이다.

또, ‘성로비’를 통해 경쟁 국가의 하급 관료에게 접근해 정보를 캐는 짓 따위는 자본주의 국가의 전형적 특징이지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 자기해방인 사회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남한의 우파 지배자들이 북한의 이런 행태를 비난할 자격이 없음도 물론이다. 이들은 과거 독재 정부 시절에도 지금 북한이 하는 것처럼 정보 요원들을 국경 너머로 파견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감시한 전통이 있다. 이들은 원정화가 감히 하지 못한 일도 과감히 수행했는데, 김대중이 일본에서 납치돼 살해될 뻔한 것이나, 중앙정보부 요원이 프랑스에서 김형욱을 살해한 것은 이의 한 사례일 뿐이다.

탈북자 차별·통제 강화 반대한다

탈북자 인권 수호에 앞장서는 양 행세하던 우익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내 거주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 이미 2006년 한나라당 의원 정형근은 “탈북자 중에는 간첩이 많다”며 탈북자 혐오증을 부추긴 적이 있다.

이런 우익의 이중성은 그들의 대북 인권 제기가 정략적일 뿐임을 반영한다. 한편에서 반공 논리를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탈북자들을 이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조장해 탈북자 전면 수용이라는 ‘부담’을 피하고자 한다.

이번에도 국정원과 통일부는 ‘위장 탈북 간첩’을 빌미로 탈북자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거주 탈북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탈북자 가운데 간첩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그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 통제·억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을 각종 반복 안보 강연에 동원하고 심지어 대북 첩보원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이 ‘탈북자 안보 위협론’을 제기하는 것은 위선적이기 짝이 없다.

압도 다수의 탈북자들은 평범한 노동자·서민이다. 이들은 극심한 경제적 곤궁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다. 매년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 중 관리직·전문직 이상은 3~4퍼센트에 불과하다.

인도주의?

우익은 남한의 ‘인도주의적’ 탈북자 수용 정책을 북한이 악의적으로 이용했다지만, 남한 정부의 탈북자 수용은 매우 제한돼 있다. 게다가 북한을 이탈해 10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탈북자에게는 정착 지원금조차 주지 않는다. 이는 1990년대 중반의 식량 위기 때문에 최

2006년 타이 당국이 불법체류자라며 체포한 탈북자들 – 국경 너머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다

대규모로 북한을 이탈했던 주민들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게 남한의 ‘인도주의적 탈북자 수용정책’이다.(최근 이명박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 요청조차 묵살하고 있어 북한 민중을 굶겨 죽이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자유왕래할 권리도 제약돼선 안 된다. 자유왕래가 가로막혀 있기에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다 북한에 밀입국하기도 한다. 북한의 가족을 돕기 위해 비밀리에 돈을 부친다. 북한 현지에 연결된 탈북자들의 비공식 네트워크들은 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 정부 모두 이런 탈북자들의 네트워크를 불온한 것으로 취급한다.

원정화 사건은 가혹이나 열악한 탈북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현재 탈북자들의 실업률은 무려 20퍼센트에 가깝다. 편견과 생활고에 지쳐 일부는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 일부는 제3국으로 망명하길 원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다. 탈북자들은 남북한 지배자들의 위선 때문에 남과 북 모두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남한의 진보진영은 남북한 민중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탈북자들의 이주 자유를 옹호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북한 체제에 대한 잘못된 환상 때문에, 또는 ‘남북 화해’를 위해 북한 지배자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는 뒷전으로 밀려나다

자일스 자이 웅파콘
타이 좌파단체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지난 2년 또는 그 전부터, 특히 2006년 9월 쿠데타 뒤로 타이에서 진정한 사회·정치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대신 타이 사람들은 — 안타깝게도 사회 운동 진영을 포함해 — 지배계급의 두 정파 간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지배계급의 한편에는 타이락타이(TRT), 탁신, 국민의힘(PPP)[TRT의 후신]과 정부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국민민주주의연대(PAD)와 친쿠데타 장교·판사, 민주당 등 권위적 왕정 지지자들의 느슨한 연합체가 있다. 왕정 지지자들은 한 조직으로 통일돼 있지 않다. 그들은 오직 탁신의 정당을 몰아내겠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뿐이다.

이 두 정파는 상대방의 거울 이미지다. 둘 모두 타이 자본가 엘리트 집단에 확고히 뿌리박고 있고, 민족주의적이며, 인권을 짓밟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옛 탁신 정부와 오늘날 사막 정부 모두 남부 무슬림 지역에서 폭압적인 탄압 정책을 취해 왔고 왕정 지지파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심지어 크루세 사원의 학살 사건에 연관된 판롭 빈마니가 지도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거울 이미지

또, 두 정파의 지도자들치고 부패 전력 이 없는 이가 없다. 정치인은 모두 합법이든 불법이든 비리에 연관돼 있다는 사실은 타이에서 상식에 속한다. 군부의 비리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2006년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도 마찬가지였다. 2006년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은 스스로를 국영기업 이사로 임명하고 강제로 군 사비 지출을 늘렸다.

또 이들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탁신 지지파만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처벌했다. 사실, 법원은 탁신 집권기에는 탁신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타이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부자와 권력가들을 지원한다. 노동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늘 노동조합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 타이에는 배심원제가 없다.

물론 두 정파 사이에는 차이도 있다. 탁신 지지파가 선거를 통한 집권 전략, 의회 민주주의, 금권 정치를 추구한다면, PAD 등 왕정 지지파는 군사 쿠데타, 선출직 의원 수 감축, 임명직 관료와 군부의 힘 증대를 추구한다. 이들의 주장은 가난한 대중은 너무 멍청해서 투표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PAD는 또 왕정을 아주 확고히 지지한다. 이들은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길 바라고, 캄보디아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고대 크메르 사원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려 했을 정도로 호전적이다. PAD의 지도자 피뎡 통차이가 구상하고 있는 전략은 정치적 혼란을 부추겨 기존의 각종 기

구·정당들을 모두 무력화한 다음, ‘새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 ‘새 질서’는 민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 정의와 평등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다.

혼란

경제 정책에서 탁신 지지파는 신자유주의와 기층 케인스주의를 혼합한 이중 전략을 추구한다. 이들은 대중이 빈곤 상태로 방치돼선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빈곤층을 위한 실질적 정책 — 의료보장제도 — 을 실행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이들은 부자에게 세금을 매기고 복지국가를 수립하는 데 반대한다.

왕당파 PAD 시위대(위)와 친정부 시위대(아래)

반면 PAD와 민주당 등 왕정 지지파는 철저한 통화주의자들[정부의 경제 개입에 반대하는 보수적 경제 사상]이다. 이들은 빈곤층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임금을 더 쥐어짜고 싶어한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 중 하나인 타이 국왕은 이런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 그는 사람들이 분수에 맞게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자족 경제”를 주창해 왔다. 소득 재분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선거에서 계속 탁신 분파를 지지해 온 것이다.

타이에서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찬밥 취급을 받아 온 데는 사회운동과 NGO 네트워크, 노동조합이 겪고 있는 심각한 혼란 탓이 컸다. 1980년대 중반

타이공산당이 몰락한 뒤, 민중운동 진영은 새로운 슬로건을 채택했다. “해답은 농촌에 있다.”

이것은 단일쟁점주의에 따라 농촌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NGO 전략이었다. 이 슬로건은 정부의 태도와는 달리, 농민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제 PAD를 지지하고 있는 일부 민중운동 진영의 슬로건은 이렇게 바뀌었다. “농민들은 멍청해서 투표할 자격이 없다!”, “해답은 군대와 법원, 왕에게 있다.”

독립적

NGO 조정위원회의 일부와 남반구조점의 일부 타이 활동가들, HIV+ 네트워크, 민중의친구들, 일부 농민 집단들은 PAD를 지원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요구들을 지지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철도노조와 타이항공노조도 PAD 지지에 나섰다. 그러나 철도노조 지도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복지도 제공받지 못한 채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없다. 타이항공노조는 군부와 유착한 항공사와 공항 당국의 부패를 눈감아 왔다. 두 노조는 대기업 노조들이 공격받을 때마다 모른 척했고, 오직 고위층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행동을 취할 준비를 했다.

PAD와 한편이 아닌 활동가들은 종종 정부에 대한 지지로 나아간다. 이것은 PAD를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PAD 시위대를 공격하는 경찰에 환호하기까지 한다.

타이 민중운동 내에 독립적 계급 정치가 부족한 현실은 모든 정치와 정치조직을 부정하는 경향 때문이다. 또 그것은 타이공산당이 몰락한 뒤 스탈린주의적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로 아나키즘적 사고가 만연하게 된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NGO의 로비 정치도 원인들 중 하나다.

이런 두 전략 모두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이 [지배계급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치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 ‘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구체적인 민주적 요구들을 제시하지 않는다.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도 우리는 정치적 독립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각종 기구들에 대한 아래로부터 통제를 확대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는 사법 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군부의 영향력 축소, 군사비 삭감, 부자들에게 세금 증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엘리트 집단들 중 한편을 선택해야 하고 이런 개혁 조처들은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잘못된 것이다. 지배계급 간 다툼은 결코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다. 또 이 다툼이 엘리트 집단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재결집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민주적 공간은 더 좁아질 것이고 사회운동의 영향력은 더 약해질 것이다.

■ 타이의 최근 정치 연표

- 2006년** 2월 탁신 일가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민주주의연대(PAD) 반정부 시위
탁신, 의회 해산 뒤 조기총선 실시 발표
4월 민주당의 선거 거부 속에 총선 실시, 집권당 타이락타이(TRT) 압승
5월 헌법재판소, ‘4·2 총선’ 무효 및 재선거 판결
9월 19일 군부 쿠데타 발생, 탁신 총리직 축출
- 2007년** 8월 군부가 발의한 신헌법 국민투표 통과
12월 총선, TRT의 후신 국민의힘(PPP) 최다의석 확보
- 2008년** 6월 집권당 신헌법 개정 추진, 민주당 내각불신임안 제출했으나 부결
PAD 주도 반정부 시위 확산
8월 26일 반정부 시위대 정부청사 점거
9월 2일 반정부·친정부 시위대 충돌로 1명 사망, 40여 명 부상
사막 총리, 군 투입 후 비상사태 선포

1987년 6월항쟁과 2008년 촛불항쟁, 무엇이 달라졌나

2008년 촛불항쟁을 1987년 6월항쟁에 비유하는 얘기가 많다. “어게인 1987”이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말이다. 또한 “5공식 독재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도 많다. 그러나 **다함께 운영위원 최일봉**은 지난 2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의 정치적 함의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함께** 주최의 대규모 포럼 **맑시즘2008**에서 이 글의 초안에 따라 연설했다.

1987년 6월항쟁은 위대한 반독재 민주화 민중 항쟁이었다. 독재 하에 신음하던 수백만 민중이 거리로 나온 역사적 사건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민주화’가 6·29 선언으로 일단락된 1987년 6월항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단숨에 이뤄진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민주화는 6월항쟁과 뒤이은 7~9월 노동자 대파업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아직도 안 끝났다. 그러기에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1980년 대식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민주당과 다수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은 분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인상에 따른 것일 뿐이다.

1987년과 2008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 물론 그 변화는 모순 투성이의 변화다. 앞으로도 변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모순은 변화의 동력이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한 변화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1. 권위주의에서 준(準)자유민주주의로 국가 형태의 변화

언제나 우파는 소위 ‘건국’ 이래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들의 다른 많은 말처럼 거짓말이다. 언론·출판·결사의 자유가 없던 정치체제를 ‘자유주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속임수다. 심지어 지금의 정치체제도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못 된다.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전혀 사문화(死文化)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소제목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준(準)’이라는 접두사를 넣은 것이다.

그럼에도 친북 좌파와 혁명적 좌파를 제외하면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는 지난 20년 동안 크게 신장됐다. 그런데 흔히들 이 ‘민주화’의 동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듯하다. 맑스주의자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부른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은 **대중적 노동자 조직들**이라고 맑스는 지적했다. 즉, 민주화의 동력은 노동계급의 투쟁과 그 조직이다(디트리히 뤼시마이어,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나남, 1997년).

자유주의 야당과 그 정치인들이 민주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교수와 지식인 등 전문가 계층이 가져다 준 것도 아니다. ‘제도권’이 아니라 거리와 산업현장의 투쟁과 조직이 군장성들과 국가관료, 재벌 등에게 민주화를 아래로부터 강제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노동계급의 대중 조직들이 아직 건재한 상황에서 1980년대식 권위주의로의 회귀는 그다지 쉽지 않다.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이 심각한 경제·사회·정치 위기와 파시즘의 위협에 직면하고 공산당과 사민당이 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히틀러가 어부지리로 집권한 사례에서 보듯이 반동에 의한 민주화 과정의 역전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노동계급의 대중 조직들이 와해되거나 심각하게 약화된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명박의 경찰국가가는 분명히 저항운동 세력에게는 독재다. 고전적 맑스주의자들이 지적했듯이, 다른 모든 자본주의 국가 형태들과 꼭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부르주아 독재의 한 형태**다. 형태가 다양하긴 해도 자본주의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도구다. 형태가 다양해도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급을 필요로 하고,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작용한다. 더구나 경찰과 군부 등 국가의 억압 기구는 자본가 계급을 위한 최후의 보루 구실을 한다.

동력

그러나 1987년 6월항쟁 전에 전환 정권이 당시 김영삼·김대중의 민주당(정확한 명칭은 통일민주당)에게 가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탄압을 이명박 정부는 현 민주당에게 가할 수 없다.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없었고, 심지어 가택연금 상태였다.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은 바로 몇 달 전까지 십년 간 정권을 잡았던 자들이고, 그래서 아직도 국가 기구 안에 그 지지자들이 상당수 있다.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에 대해 개혁주의 정당인 영국 공산

당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권위주의로 착각함으로써 공산당은 자신의 ‘민주대연합’ 노선(비금융 분야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보수당 내 ‘개혁파’ 정치인들과 동맹한다)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급진 좌파는 지금 “반독재 국민전선”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석형 민주노총 위원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등)이 혹시 이명박의 경찰국가를 1980년대식 권위주의로의 회귀로 착각하고 자본가 계급 정당인 민주당과 동맹하려 하는 게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더는 6월항쟁 당시처럼 탄압받지 않는다. 그들은 심지어 바로 몇 달 전까지는 10년 동안 집권하며 자본가 계급의 노동계급 착취·억압 강화에 협력했던 세력이다.

물론 민주당과 사안별로는 연대할 수도 있다. 그들이 우리 운동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우리 운동이 강력하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뜻에서 우리 운동에 대한 찬사일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동참은 우리가 그냥 덩으로 얻는 것으로, 그것도 매우 경계해야 할 덩인 것이다. 촛불 시위가 한참 진행되던 때에야 비로소 동참한 민주당은 촛불 시위가 정점에 도달하고 이명박 정부가 30개월령 최고기 관련 양보 제처를, 그리고 한나라당이 가축번 관련 양보 제처를 취하면서 반격의 시간을 벌던 때 맨 먼저 ‘제도권’으로 돌아가려 안달이었다.

급진 좌파는 1936년 프랑스와 스페인, 1973년 칠레 등 각국 공산당은 바로 몇 달 전까지 십년 간 정권을 잡았던 자들이고, 그래서 아직도 국가 기구 안에 그 지지자들이 상당수 있다.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정부에 대해 개혁주의 정당인 영국 공산



6월 10일 1백만 명 시위 - 운동이 정점에 도달하자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운동의 수위를 조절하고 연착륙시키려 애쓰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2 노동계급 조직의 성장

권위주의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국가 형태의 변화에서 핵심적 동인(動因)은 노동조합과 개혁주의 정당 등 노동계급 조직이라는 사실이 두 번째로 언급할 변화다.

6월항쟁 직후인 7월 초부터 9월 초순 사이에 대중 파업 물결이 크게 일었다. 그 성과로 ‘민주노조’ 조직들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민주노조 지도자들의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설립됐다. 이 조직 노동계급의 존재가 6월항쟁에 견주어 본 2008년 촛불 운동의 최대 이점이었다.

불행히도 촛불 운동은 이 이점을 활용하지 못했다. 조직 노동계급의 힘은 사용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당의 국민전선(인민전선) 경험에서 탄산지식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교훈인즉, **반동에 직면해 노동계급 세력이 자본가 계급 세력과 동맹하면 오히려 마비돼 버려, 반동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개혁주의의 등장

앞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전환의 사회적 내용은 대중적 노동 단체들(민주노총 조직들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라고 했다. 개혁주의를 가리키려면 이 단체들 예다 적어도 NGO들, 진보연대 등도 덧붙여야 한다.

이 개혁주의는 1987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했다. 그 때는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의 정당인 통일민주당이라는 자본가 계급의 개혁주의만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을 지지하는 일종의 DIY(do-it-yourself: 이하 ‘자발적’)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경향이 노동자·민중 운동 내에 존재했다. 당시에 ‘재야’로 불렸던 덕망가를 가운데 김대중과 김영삼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발적 개혁주의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개혁주의 경향은 노동자와 여타 천대받는 사회집단들 속에서 자발적 경향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의식적 개혁주의 지도자들에 의해 잘 조직된 명확한 세력으로 존재한다.

이 개혁주의는 촛불 운동이 1백만 거리 시위 수준으로 고양되는 데까지는 정치적 상징 구실뿐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의 조직 등 운동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운동이 정점에 도달하고부터는 온건파 NGO 지도자들이 앞장서 운동의 수위를 조절하려 노력했다. 온건파 NGO 지도자들은 운동의 규모가 더 커지지 않고 부드럽게 연착륙하도록 애썼고, 광우병 위험 최고기 문제라는 단일 정점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의제 확장’(요구 확대)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1990년대 중엽의 포스트맑시즘(포스트모더니즘의 일종 또는 아류)으로 상당 정도 되돌아가, 그 자율주의적 개념들으로써 자신들의 개혁주의를 정당화하려 애쓰는 것이다. 가령 이명박의 대통령직 사임을 촛불 지지 세력 전체의 공동 과녁으로 삼아야 한다는 급진 좌파의 주장에 반대해 그들은 ‘운동을 어느 한 방향으로 가져가려 하지 마라’, ‘생활 속 운동이 중요하다’며 국가 문제를 회피했다. 의제 확장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도 포스트맑시즘의 정체성 정치의 잔재라 할 수 있다.(물론 1990년대 중엽의 정체성 정치는 연대 자체를 거부하고 파편화를 선호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정체성 정치와 다르긴 하다.)

또한 대중의 자발성을 이유로 리더십과 그 리더십에 권한이 집중한 정치단체를 거부할 때도 포스트맑시즘이나 네그리-홀러웨이의 ‘자율적 사회운동’ 개념들이 동

원된다. 물론 자발성은 훌륭한 것이다. 하지만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등 엄연한 리더 구실을 하면서도 리더십이 배제된 의미의 자발성을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대중의 선두가 아니라 **후미**를 쫓는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온건파 NGO

리더십이 스탈린주의 정당의 군대식·하향식 일방주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 평당원들과 대의원들은 맘껏 토론해라. 리더인 나는 내 길을 간다’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투쟁 속에서 토론하고 다

수결로 결정해 행동 통일을 하는 일종의 파업위원회식 리더십이 있을 수 있다. 서로 배우고 교육하는 리더십 말이다.(이와 관련해 <맛불> 90호에 실린 필자의 글, ‘현 촛불시위의 잠재력과 과제’를 참고하시오.)

실제로는 지도권을 행사하려 애쓰면서도, 지도력을 인정받기 위해 분투하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은 ‘자발성’의 미명 하에 꺾히거나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주의자들의 비민주적인 책략이거나 정치적 무능력자들의 자기 정당화일 뿐이다.

개혁주의 문제는 우리를 6월항쟁과의 네 번째 차이점 문제로 이끈다. 바로 급진 좌파의 취향성 문제다.

» 10면으로 이어짐

20년 전과 달리 대중적 노동자 조직들이 존재하지만, 불행히도 촛불 운동은 이 이점을 활용하지 못했다

위: 1987년 자본가계급의 개혁주의 지도자였던 김대중과 김영삼 가운데: 1995년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아래: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대회

1987년 현대중공업 투쟁 - 이런 노동계급의 투쟁과 그 조직이 민주화를 아래로부터 강제해 왔다

1987년 6월항쟁과 2008년 촛불항쟁, 무엇이 달라졌나

» 9면에서 이어짐

4. 급진 좌파의 취약성

6월항쟁은 지금 이 순간 촛불 운동이 겪는 탄압 수준보다도 더 혹심한 탄압 수준 하에서 치러졌다. 그런데도 거리 현장에서, 또 기층에서 수많은 혁명적 또는 급진적 좌파 투사들이 존재했기에 운동은 더욱 커져만 갔다. 대학 각급 학생회와 학회·동아리, 가톨릭과 개신교 민중교회, 노동운동 지원단체, 토론 서클 등 ‘풀뿌리’ 수준에서 곳곳에 혁명적 또는 적어도 급진적 좌파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모두 모종의 스탈린주의자들이었다. 특히 주체주의 계열이 다수였다. 하지만 모두 혁명가들이거나 급진파들이었다.

2008년 거리와 기층에서는 급진 좌파의 조직 규모가 협소했고, 사기도 높지 않았다. 이는 옛 소련 붕괴와 현 북한의 존재와 관계 있다. 그나마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행동에 대해 회의적인 종파주의로 말미암아 그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또, 상당수는 노동조합주의적 유산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종파주의

이들은 급진 좌파답지 않게 조직 노동계급의 결정적 중요성이라는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배자들이 쳐놓은 함정인 ‘폭력 대(對) 비폭력’의 딜레마에 스스로 빠져 기껏해야 전경버스 치우기나 넘어가기, 전경과 충돌하기 등 물리적 돌파구를 찾는 데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맛볼> 91호에 실린 필자의 글, ‘체제의 폭력에 맞서는 효과적 방법’을 참고하시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는 1960년 4월 혁명 때의 경제력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 한국 경제의 규모가 세계 13위가 된 오늘날, 게다가 1980년대까지의 일당국가 하에서와 달리(준準)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에서는 자본의 권력도 강화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거리 시위가 군대와 전의경 사병들의 사기 급저하 등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진격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이는 그런 사병들의 부모·형제·자매·친구인 노동자들의 대중 파업을 통한 자본가 경제력 마비시키기가 없으면 별로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다. 참전한 전쟁의 패배 같은 정부의 정치적 대실수 같은 이례적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다.

다행히도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확대와 함께 노동계급의 힘과 조직도 성장했다. 급진 좌파는 이 점을 밀친 삼아 전진할 엄두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게다가 심각해지는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이들에게 쇄신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 위기 하에서는 작은 개혁을 얻기 위한 투쟁도 거대한 투쟁으로 분출할 수 있다

5. 경제 위기

경제 상태의 차이가 사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1987년은 경제적으로 어떤 해였는가? 1960년대 초 산업화 드라이브가 걸린 이래 1980년대 중엽은 GDP(국내총생산) 증가율로 따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최고조에 이른 때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87년의 경제성장이 단연 최고 수준이었다. 한 마디로 말해 1987년은 한국 자본주의의 최전성기이자 절정기였다. 반면에 촛불항쟁이 분출한 2008년은 IMF 공황 이래 위기와 제한적 회복이 되풀이되는 한국 자본주의의 쇠퇴기다. 이 시대는

(1) 지배계급의 위기 시대이다. 자본의 수익성 위기뿐 아니라 체제 신뢰성의 위기, 지배 이데올로기의 위기가 엄습하는 시기다. 물론 저항 이데올로기도 시험대에 오른다.

(2) 지배자들 간의 갈등 격화 시대다. 국내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 등 정치 위기가 격화하고, 각국 지배계급 간 갈등이 전쟁을 낳는다.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이 다른 경쟁 열강들을 의식해 독재정권 하의 후진국을 공격하고 점령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열강들, 가령 러시아가 대리인을 내세워 미국과 서구의 대리인과 충돌을 불사할 수도 있다. 그루지야 사태에 이어 어쩌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3) 1987년은 노동계급 대중에게 희망

이 있었다. 연공서열의 평생직장과 퇴직금이 보장돼 있는 듯했고, 국민주와 사원아파트 등도 있었다. 노동자들은 자기 자녀는 공부를 너무 못하지만 않는다면 자기가 겪은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불안, 불확실, 뱃속 깊이 쓰라린 감정 등이 특징인 마음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은 1987년이나 1997년 대과업보다 더 큰 투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아도 화산처럼 대규모 분출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 정치 행동을 회피하는 한은 이런 일이 쉽사리 일어나지는 않는다.

(4) 개혁주의 정당들이 이득을 볼 것이다. 대규모 저항은 조직과 의식이라는 퇴적물을 반드시 남긴다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지적했다. 이번 촛불항쟁의 최대 성과는 우파 정권에 맞서서도 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항 운동 참가자들이 얻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촛불항쟁을 통해 새로운 급진적 청년세대가 출현했다. 이들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조직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조직이 채택하는 이데올로기는 혁명적이라기보다는 단지 개혁적이거나 기껏해야 급진적이기 쉽다. 의식이 하루 아침에 도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개혁주의 정당들이 득을 볼 것이다.

하지만 개혁주의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위기로 지배자들이 개혁 양보를 좀체 안 하려 할 뿐 아니라 기존의 개혁조차 도로 빼앗아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핵심 모순이다. 즉, 광범한 노동 대중에게서 한창 인기를 얻으며 상종가를 치는 때는 동시에 개혁주의자들이 공약을 이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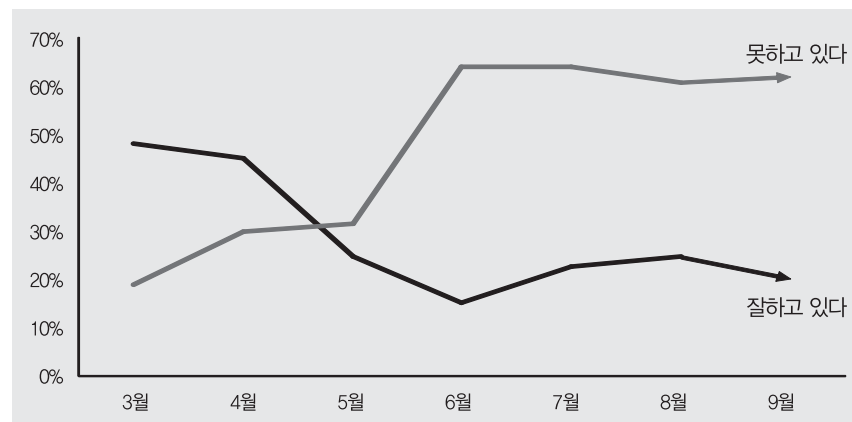
(5) 급진 좌파에게도 기회가 온다. 앞의 (1)~(4)의 조건들은 급진 좌파에게도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다. 하지만 그저 순탄하기만 한 길은 아니다. 우여곡절과 패배, 사기저하가 그득한 우회로다. 게다가 북한을 핑계로 한 보안법에 근거한 국가 탄압마저 혁명적 좌파에게는 위협으로 존재한다.

이런 일련의 조건들은 급진적, 특히 혁명적 좌파가 일회일비하다가 공동전선 활동을 기피하고 종파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심란해질 수 있는 상황을 시사한다. 일례로 촛불 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4)에서 언급한 성과말고도 억압받는 대중 모두의 적인 이명박의 지지율이 촛불 운동으로 20퍼센트 대로 떨어진 것 자체가 크나큰 성과인데도 말이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하나 막지 못했다는 생각은 일면적이다. 촛불 운동은 이미 6월 10일 이후 ‘반정부 운동’으로 질(質)이 달라졌다. 우파와 지배자들 말대로 ‘변질’한 것이다.

게다가 의료 민영화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경쟁 물입 교육 반대, 유가인상 제한 등 촛불 운동 참가자들이 자유발언 등을 통해 스스로 제기하거나 전폭 지지한 요구들과 의제들은 거의 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은 생활고 문제에 민감한 관심을 나타낸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그들은 노동자들과 서민들이었다.

이매뉴얼 윌러스틴이 “반체제 운동”이라고 부른 것이 한국에서 이제 막 시작됐다. 열쇠는 비종파적이면서도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근본적 사회변혁 운동가들이 쥐고 있다.



이명박 국정지지도 조사 (KSOI)
- 거대한 운동이 남긴 발자취와 경제 불안정 때문에 이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듯하다



여러분의 기고와 편지를 환영합니다.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9월 8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지면 관계상 실리지 않는 독자편지나 소식/보고는 온라인에 실립니다.

한국사회포럼 ‘촛불 이후’ 토론에서 느낀 점

8월 30일 한국사회포럼에서 ‘촛불 이후 정치사회지형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재구성’ 토론회가 있었다.

촛불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토론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였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나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촛불 운동을 과도하게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라는 등 거대담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의료민영화, 물·전기·가스 사유화 등에 반대하는 촛불 운동의 주요 요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단일 쟁점 집중을 통한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있어 서인지, 하나하나의 쟁점에만 의미를 부여할 뿐 쟁점들 사이의 연관 고리를 찾아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신자유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는 민주당을 중요한 연대 세력으로 생각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듯했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진보진영의 공동 대응에서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도 논쟁이 됐다. 김민영 사무처장과 박진섭 부소장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당과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사무처장은 “중도개혁 세력을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갈라내는 것에 골몰하기보다… 범진보로의 진화,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촛불 운동은 처음부터 신자유주의 논리에 도전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연대해 진보진영이 얻을 것은 거의 없다. 촛불 운동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사람들은 불과 반년 전까지 온갖 배신을 일삼으며 기대를 산산히 허물어 버린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 운동에서 제기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의료시장화, 입시경쟁 강화, 물·전기·가스 민영화 문제 등은 모두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일 때부터 추진한 정책들이다.

촛불운동에서 민주당이 한 구실도 매우 피죄죄하다. 민주당은 촛불 운동에 가장 늦게 들어왔다가 가장 먼저 국회로 들어갔다.

이명박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하면 얻는 것도 없이 진보진영의 이미지만 망칠 뿐이다. 게다가 민주당과 함께하기 위해서 운동의 요구를 낮추다가는 진보진영이 해야 할 투쟁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

선영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인 학살에 분노한다

지난 8월 22일 새벽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시골 마을을 폭격해 마을 주민 90명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중 60명은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이였으며, 19명은 여성이었다! 이 일에 대해 미군은 그저 반군을 잡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 것뿐이라고 한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다.

게다가 다국적군이 아프가니스탄 헬만드 주에서 27일부터 5일간 탈레반 반군을 잡기 위한 군사작전을 감행, 5백 명이 넘는 민간인이 죽었다.

이토록 많은 피해를 내고 있지만 <한겨레>가 “희망을 건다”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에 대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으로 집중할 것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구도를 어떻게든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바꾸려는 지금, 우리도 더 큰 반전 운동으로 그들에게 맞서야 한다.

나지현

민족주의 좌파 동지들도 방어해야

사노련 사건을 보면서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사노련 회원을 체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 줬기 때문이었다. 사노련의 ‘촛불행동강령’이 촛불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촛불과 진보진영을 탄압하려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은 이번 사노련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정부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하는 것을 똑바로 봐야 한다. 특히 일부 진보 세력은 사노련 사건에만 분개할

것이 아니라 10년 전 한총련 의장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 3년을 받은 윤기진 씨 같은 민족주의 좌파도 이명박의 마수(魔手)에서 방어해야 한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나치에게서 방어하기를 주저하다가 정작 나치가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마틴 나이폴러 목사의 고백처럼, 정치적 입장을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탄압받는 이들을 방어하지 않으면 이명박의 칼날은 소심한 당신을 향해 날아올 것이다.

주동빈

국유화 요구에 대해

나는 지난 호(<저항의 촛불> 3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지지한다. 그 중에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부분을 읽고 얼마전 ‘민영화에 반대한다. 그럼 국유화는 진보적인가’하는 문제로 토론한 것이 생각났다.

자본의 국가소유가 사적소유에 비해 반드시 진보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옛

소련·북한 등에서 생산수단은 국유화돼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통제권은 노동자 계급이 아닌 국가 관료들에게 있었다. 또한 세계 금융 위기로 파산할 뻔한 노던록[영국의 모기지 은행]을 영국 정부가 이번에 사실상 국유화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유화는 경제 위기에서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쓰이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주노조 전위원장 사길을 떠나 보내며

지난 8월 17일 명동에서 이주노조 전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샤길 씨의 환송회가 열렸다. 한국 생활 16년차인 그는 꽃다운 청춘을 “무정한 나라” 한국에서 보내고, 40대 중년이 돼 본국인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

형식적으로는 ‘자진출국’이지만, 사실상 강제출국이나 다름없다. 산재로 척추디스크를 얻은 샤길 씨는 장기간 산재요양 후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 비용을 신청했으나,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 헌법소원을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헌법소원 기간 동안의 체류조치 보장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렸다. “뺨말시위, 강연 등 애초의 체류 연장 목적과는 다른 활동을 많이” 한 것이 죄라는 것이다. 이주노조 활동가의 씨를 말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격은 정말 끔찍하다.

샤길 씨는 같이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손가락이 잘려 나갔는데 수술비용과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접합수술을 못 받은 일에서 느낀 분노를 말한 바 있다. 그는 이 나라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만행의 역사를 가슴에 아로새긴 증인이다. 그리고 이토록 부당하고 처절한 현실을 스스로 바꿔 보고자 이주노조 건설을 위해 헌신해 온 우직한 투사다.

환송회에 참가한 한 이주노조 조합원은 환송사를 차마 잊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정말이지 그의 귀국을 마냥 축하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는 가슴 아픈 모습이었다. 그러나 샤길 씨는 “내가 떠나서 지구의 어디에 있든 노동자, 농민, 밑바닥 계층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압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이날 환송회에 참가한 젊고 열정이 가득한 이주노조 조합원들은 만행을 고발할 증인들이고, 샤길 씨가 못다 이룬 진정한 ‘코리안드림’을 실현할 주역들이다.

전현정

그렇다면 민영화 반대와 이미 민영화한 공기업에 대한 재국유화 요구는 쓸모없는 짓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제기되는 민영화 반대와 재국유화 요구는 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공공서비스 후퇴와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제2기 촛불 운동을 열망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고 진정한 사회 공공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토론하자.

오동환

아프가니스탄의 어제와 오늘



점령군의 민간인 학살과 이에 맞선 저항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부시는 이명박 정부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비전투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류학 조사를 벌인 경험이 있는 영국 사회주의자 **조너선 노**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역사를 소개하고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렁에 빠지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1979년 말 소련 침략과 함께 30년에 걸친 침략 전쟁과 내전을 겪기 전, 아프가니스탄은 농업 사회였다. 90퍼센트가 농촌에 살았고, 그 중 80퍼센트가 농민이고, 10퍼센트가 유목민이었다. 도시민은 10퍼센트에 불과했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대지주들이었다. 즉, 중앙 정부나 도시에 있는 왕이나 자본가들이 아니라 대지주들에게 진정한 권력이 있었고 그들은 농촌에 자기만의 소왕국을 건설했다.

대지주 밑에는 자작농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 땅을 소유했고 다른 농민들과 소작 계약을 맺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토지가 아예 없거나 토지 면적이 작아 다른 사람을 위해 소작을 해야 했다.

토지에 대한 권한은 매우 불안정했다. 중앙 정부가 매우 약했고 법정은 언제나 뇌물을 주는 자들을 편들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매우 가난하고 불평등한 사회였고, 경제개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부르주아가 경제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왕과 대지주가 부르주아의 재산을 뺏곤 했다. 왕정 정부는 미국과 소련의 지원에 의존해 생존했다.

왕정은 재정의 대부분을 교육과 군대에 썼다. 고등교육 제도가 탄생하면서 새로이 교육받은 계급이 나타났다. 이 계급은 자작농과 상점주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지주와 왕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공산주의자와 소련 침략

이 새 계급은 [소련식] 공산주의와 이슬람주의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공산주의자가 다수였고, 그들은 1978년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몰아냈다. 아프가니스탄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권위주의적 근대화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대지주에 반대하고 여성 해방과 평등을 지지했다.

처음에 그들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았다. 아무도 왕좌를 방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왕좌가 제거된 다음에 농촌에

서 저항이 시작됐다. 농촌의 종교 교사인 물라가 이 항쟁을 주도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농촌에 기반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과거 중앙정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동자를 잡아 고문했다. 그리고 분노가 확산되자 폭격을 했다. 많은 무고한 빈농이 죽으면서 저항의 규모가 갈수록 커졌다.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고, 아프가니스탄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침략자들의 품으로 달려갔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도시민들의 지지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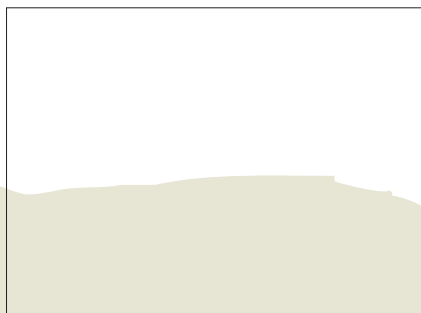
소련 침략군은 아프가니스탄 공산주의자들의 도움 아래 사회주의·토지개혁·여성해방의 이름으로 침략 전쟁을 벌였고 점령을 지지했다. 그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 총인구 1천5백만 명 중 50~1백만 명이 죽었고 지뢰 때문에 1백만 명이 불구가 됐다. 또, 6백만 명이 난민이 됐다. 만일 한국에서 사회주의자와 페미니스트들이 한국민 2백50만 명을 죽였다면 아무도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소련 점령군에 맞선 싸움이 7년 동안 지속됐다. 이슬람주의자들이 항쟁을 주도하는 구실을 했고, 결국 다수의 지지를 받게 됐다.

탈레반의 등장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인 1988년에 소련 점령군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 문제를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사회의 계급적 불안정성이 다시 등



1978년 12월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소련군 탱크

장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영국 정부가 토지 소유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1978년] 아프가니스탄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을 때, 농촌 대지주들은 자기 땅을 떠났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기 땅을 떠났고, 이른바 '사령관'이라 불리는 자들 — 지역 반소 저항 지도자들 — 이 새로운 대지주가 됐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과 토지 소유권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계속 싸워야 했다.

이슬람주의 정당들은 러시아와 맞서는 동안 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원금을 끊었다. 미국이 테헤란의 종교지도자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원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1990년대 동안 내전이 지속됐다. 전국적으로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서로 다투고, 지역 사령관들도 지역 통제권을 놓고 싸웠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은 더 불안정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1995년 탈레반이 등장했다. 탈레반은 원래 파키스탄 군부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탄생한 집단이다. 그들은 주로 파슈툰 언어를 사용하는 남부 사람들로, 계급적으로 난민, 농민, 물납 소작

인[수확물의 일부를 소작료로 바치는 소작인]이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탈레반이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환영했다. 또, 도둑질을 일삼는 다른 이슬람주의자들과 사령관들과 달리 탈레반은 정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탈레반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이제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탈레반은 파슈툰 우월주의자들이었다(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북부와 중부의 비(非)파슈툰 사람들이 반발했고, 탈레반은 전국의 통치권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관통하는 석유·천연가스 수송관을 건설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탈레반은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9·11, 아프가니스탄 침략

미국이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을 때 아무도 탈레반을 위해 싸우려 하지 않았다. 미국의 동맹인 북부동맹을 위해 싸우고 싶지도 않았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오랜 전쟁에 지쳐 있었다. 1백만 명 이상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죽었다. 거의 모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주변 사람을 전쟁으로 잃는 경험을 했다. 그들은 무려 23년 동안 가장 기초적인 안정조차 누리지 못했고, 누군

2008년 9월 1일 나토군의 공습으로 죽은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는 체제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한 주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신성화 작업이 진행된 후, 오바마의 공화당 경쟁 후보는 오바마에 쏠린 관심을 뺏어오는 데 성공했다. 존 매케인이 알래스카 주지사 새라 페일린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먼저,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택되지 못한 데 불만을 품은 여성 지지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한 뻔뻔한 술책이다. 둘째, 공화당 선거 전략가 칼 로브가 “총과 하기 경기를 사랑하는 여성”이라고 부르고, ‘생명을 위한 페미니스트’[낙태 반대 단체] 회원인 사람을 택한 것은 기독교 우파에게 추파를 던지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술책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두고 볼 일이다. 페일린은 주지사로 선출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앵커리지 농촌 교외의 시장이었다. 페일린을 간택한 결과, 공화당은 오바마가 경험이 일천하다고 공격하기 힘들어졌다. 공화당의 반(反)오바마 웹사이트의 구호인 ‘08년 대통령이 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전쟁과 경제

어쨌든, 진정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조지 부시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지만, 오바마는 여론조사에서 매케인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부시 정부를 난파시킨 두 가지 쟁점은 전쟁과 경제다.

이 상황에서 매케인은 카프카스 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 — 저명한 지배계급 명망가다 — 는 “은퇴한 냉전 용사와 네오콘들”이 그루지야와 러시아 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남오세티아를 공격하도록 그루지야 대통령 사카슈빌리를 부추겼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것이 혹시 존 매케인을 백악관에 입성시키려는 작전이 아닌가 하고 상상하기도 한다.”

이런 추측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오바마는 그루지야 위기로 타격을 입었다. 또 다른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인 기던 라흐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바마 선거 캠프에 큰 분열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한편에는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나라들에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는 나토 문제에서 후퇴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서 ‘단호하자’는 쪽이 더 우세한 것 같다.”

이 문제에서 오바마는 세심한 균형을 취해야 한다. 그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택받은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이라크 침략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미국 제국을 단호하게 지킬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감새를 보이면 공화당 미친개들이 곧장 달려들 것이다.

오바마는 경제 문제에서도 똑같은 모순에 처해 있다. 오바마는 덴버 연설에서 현금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을 끝낸다는 부시의 공약을 반복하는 등,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지 않았다. 첫째 조처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하고 둘째 조처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가능한 몽상에 불과하다.

분열

오바마의 경제팀은 분열해 있는 것이 확실하다. 두 달 전 나옴이 클라인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오바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제 정책팀장 제이슨 퍼먼은 월마트 찬양자이고, 오스틴 굴스비는 [친시장주의로 악명이 높은] 시카고학과 경제학자인데, 그는 지난 2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오바마의 비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고 캐나다 대사관 관리에게 말한 것을 들려 유명해진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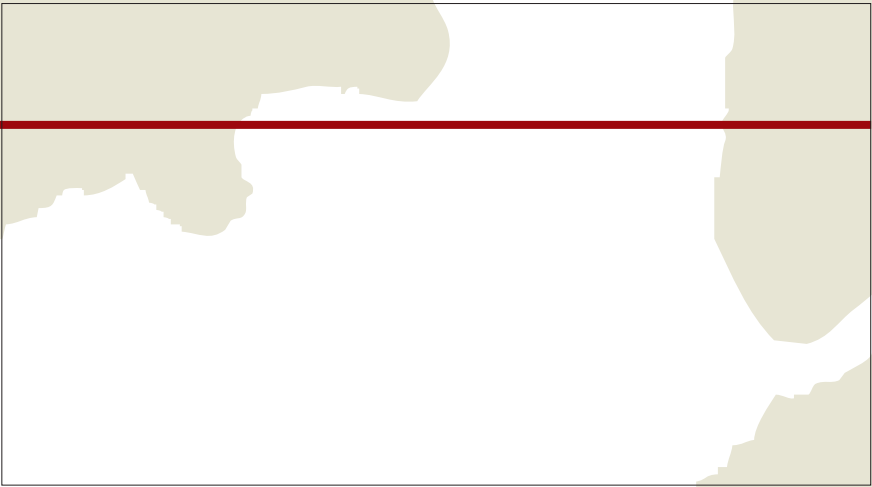
물론, 오바마 주변에는 제임스 갈브레이스처럼 좀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주 <투데이>[B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와 인터뷰한 제임스 갈브레이스는 유명한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의 아들이다. 아버지처럼 아들 갈브레이스도 시장을 관리하고 시장에 인간의 얼굴을 씌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가 대선 후보가 된 것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자신을 버린 현존 경제·정치 체제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 때문에 매케인같은 체제내 인사조차 자신을 ‘반워싱턴’ 후보로 내세우는 포퓰리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오바마는 이 체제의 산물이며 체제의 규칙에 따라 이기고 싶어한다.

따라서 오바마는 이 새장같은 체제의 가장자리를 잠깐 흔들 수는 있어도 새장을 뚫고 나가려 하지는 않는다. 그는 그 덕분에 백악관에 입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그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 믿는다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점령군의 반복적 폭격에 항의하는 행동

가 내 상점, 내 땅, 내 가족을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평화를 원했다.

대다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 편에서 싸우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파키스탄 군부의 중재 아래 탈레반과 평화 협정을 맺어야 했다.

이 평화조약에 따르면 탈레반이 카불을 떠나고 미국의 지지를 받는 꼭두각시 정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대신 탈레반과 동료들은 동남부 고향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파키스탄 산악 지역으로 이주해 살든가 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 오사바 빈 라덴도 이 협정 덕분에 빠져나갈 수 있었다. 몇 년 동안 양측 모두 평화협정을 준수했고 탈레반 지도자들은 체포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라크 상황과는 달리 거의 2~3년 동안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미국이 경제 개발과 평화와 개인적 안정을 가져올 거라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자존심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었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더는 어떤 신념도 신뢰하지 않게 됐다. 과거에 그들은 공산주의와 정치적 이슬람을 위해 목숨을 던졌다. 그러나 그들은 둘 모두에 의해 배신당했고, 이제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저항의 등장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저항이 시작됐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직면한 저항은 이라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이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 점령의 현실이 자신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외부 지원과 재건을 기대했다. 미국은 외부 지원과 재건을 약속한 적이 없었지만 말이다.

미국 점령이 시작된 후 1년 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는 워싱턴을 방문해 제발 재건 비용을 달라고 애걸을 했다. 미국 정부는 4천만 달러를 줬다. 이 건 값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중 3천만 달러는 카불에 5성급 호텔을 짓는 데 사용됐다!

최근에 미국이 좀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서구 NGO들에게 흘러들어간다. 그들은 그 돈의 대부분을 고용인들의 월급으로 쓰고 있다. 대다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수입은 하루 1달러도 채 안 된다. 그런데 외국인 NGO들은 집세로만 한 달에 2천~1만 달러를 쓴다. 1년 집세는 거의 2만 4천~12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른바 ‘개발 컨설턴트’들은 1년에 무려 50만 달러를 받는다.

사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정부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서구 NGO들도 뇌물을 받고 돈을 빼돌리는 등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분노했다.

그래서 비록 카불은 1990년대 내전과 2001년 침략으로 폐허가 된 도시지만, 동시에 현재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06년에 미군이 교통사고 직후 군중들을 상대로 총을 쏘는 만행을 저지르자 카불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미군만 공격하지 않았다. 소요는 카불 전역으로 확산됐고, 사람들은 NGO 사무실도 공격했다. 평범한 카불 거주자들은 NGO도 적으로 여겼던 것이다.

저항이 나타난 둘째 이유는 점령군의 만행이었다. 미군과 동맹군들은 탈레반을 색출한다는 빌미로 아프가니스탄 동남부를 순찰했다. 겁에 질린 미군과 동맹군의 어린 병사들은 기지 밖에는 적들이 깔려 있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라고 훈련받았다. 병사들은 곧 순찰 중에 발포를 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가족과 이웃들은 보복하려고 밤에 미군 기지를 찾아가 총을 몇 방 쏘다. 그러면 미군은 보통 공중 폭격을 요청했고, 크게 분노한 지역민들은 전면 항쟁을 일으켜 미군 기지를 무차별 공격했고 미군은 대규모 폭격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계속된 싸움 끝에 미군이 그 지역에서 철수해야 했다.

저항이 발생한 셋째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아직도 안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은 카불을 벗어나지 못한다.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불안정은 여전하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는 집단들 간 잔인한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저항이 발생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국가여서도,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민족주의 투사여서도 아니다. 사실 그들은 지쳐서 미군 점령을 받아들이려 각오가 돼 있었다. 그러나 점령의 현실과 NGO의 부패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 저항은 세계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저항은 승리하고 있다. 저항세력이 통제하는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카불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은 지난달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감옥을 습격해서 죄수 4백 명을 구출했다. 현재 그들이 국경 지역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점령군은 지고 있다. 미군은 엄청난 폭격을 통해서만 상황을 간신히 통제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쫓겨난 옛 소련 점령군들이 범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가계 부채 등으로 날마다 대중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논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등 평범한 대중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과 대다수 정치인도 대중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의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로 대중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아래 집약한 요구들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체제의 논리에 도전한다. 그래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의 결집점 구실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투쟁은 위기 상황에서 우익이 득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막는 보루가 될 수 있고, 지배자들과 사용자들 공세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

물론 이 요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자본주의 체제에 명시적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개혁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요구들을 성취하기 위한 노동자 투쟁의 논리는 자본가 계급 재산권의 토대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과 우익의 반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 투쟁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훨씬 더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적 우선순위의 복원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 말이다.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더 강화될 전쟁 위협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다음의 요구들을 둘러싸고 공동의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 물가 통제와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

고유가·고물가로 말미암은 노동자·서민의 고통 완화를 위해 물가를 통제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

●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직장폐쇄와 대량 해고를 단행하려는 기업은 공기업으로 전환시켜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적절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장이다. 왜 어떤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는 한편으로 다른 노동자는 잔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으로 삶이 망가져야 하는가?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으로 일 자리를 만들고 삶을 개선해야 한다.

●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무려 55퍼센트 정도가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

현행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적어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 FTA 반대

FTA는 단지 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와 시장화를 경제 전체에 강요하려는 것이다.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대, 식품안전 위협, 환경파괴, 공공서비스 후퇴 등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투기자본 규제

투기자본의 활동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금융 위기를 부채질한다. 투기적 수익에 중과세하고 그 세수입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투기를 규제하고, 투기자본을 양성하는 관련법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된다. 교육·의료·물·전기·가스·철도·금융·지하철·정유·통신·언론·우편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한 부분은 재국유화해야 한다.

●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보장을 위한 충분한 소득원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거의 절반이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 부담은 국민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노동으로 혜택을 받은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한다.

●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과 주택이 생활에 필요한 거주지가 아니라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하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 무상 의료

의료는 상품이 돼선 안 되고 예방, 치료, 재활 등 의료의 모든 분야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 입시 폐지와 무상 교육

초중고 학생들은 입시 경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입시 경쟁은 사교육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자사고·특목고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대폭 증액해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등록금 인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의 대학 지배도 없애져야 한다.

●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정부는 대중의 요구에 대해 재원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부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그 누진율도 올려야 한다.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유사 등에도 중과세해야 한다.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대한 점령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파병 부대를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선 안 되지만, 이를 빌미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

국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데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협력하려는 전략한 미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과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파트너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영구 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도 중단해야 한다. 군비증강 예산을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 남북한 민중의 연대를 위해

남북한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남북 적대를 이용해 민중을 억압해 왔고, 화해를 시도할 때조차 민중의 삶은 인종에 없었다. 남한 민중은 외교 논리보다 북한 민중과의 연대를 우선해야 한다. 식량 자원이 대북 압박 수단인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 민중을 위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남한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를 환영해야 한다. 또,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제국주의적 압박에 반대하면서도 북한 민중 스스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도 지지해야 한다.

●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력 강화, 인터넷·언론 통제 등 민주적 기본권을 가로막는 온갖 법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각종 보안 수사기관을 해체해야 하고, 수감 시설과 경찰·검찰·군대 등에 대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배심원제의 도입 등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패 공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부패 기업은 공기업화해야 한다.

● 여성과 소수자 차별 반대

여성·이주자·장애인·동성애자 차별 등 부당하며 운동을 분열시키는 온갖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여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무상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 낙태 금지법, 간통죄 등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출입국과 취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지구 온난화 중단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더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핵 에너지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6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광고주인 주류 언론은 진실을 은폐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개인이라면 강력히 저항할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저항의 촛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홍보전을 벌이고 대중 행동에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www.alltogether.or.kr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투장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노동자들은 온전한 주간연속2교대를 원한다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 합의의 진실

지난 8월 19일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의견접근안’을 잠정합의하려 했다.

그래서 대의원 1백여 명이 협상장으로 들어가려는 윤해모 지도부와 교섭위원들을 가로막고 항의했다. 대의원들은 “개악된 주간연속2교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협상을 중단하라” 하고 요구했다.

윤해모 지부장은 협상을 중단하고 대의원 임시 간담회를 열었다. 그 간담회에서 다수의 대의원들이 집행부를 성토했다. “의견접근안은 수년 동안 단협으로 쟁취한 것 중에 30여 개를 사측에게 고스란히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후에도 계속 윤해모 지도부는 협상장으로 향했다.

그때마다 대의원들이 협상장 앞을 가로막았다.

보수 언론에서는 ‘노노분열’을 얘기하며 이것을 주도권 다툼처럼 비방했지만, 협상장을 막은 대의원들은 잘못된 내용을 합의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현장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민주적으로 대변한 것이다. 8월 22일 대의원 간담회에서 한 대의원은 “노동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주인이 아닌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게 과연 민주노조냐”고 일침을 놔다.

잘못된 합의안

윤해모 지도부는 이런 압력에 밀려 재협상을 시작했고 8월 21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없고 부품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득이 되는 온전

한 주간연속2교대를 쟁취하려면 전면파업과 부품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공동 투쟁이 필요했다.

그런 투쟁을 회피하던 윤해모 지도부는 의견접근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정도로 투쟁을 끝내며 9월 2일 다시 잠정합의를 해 버렸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동강도가 강화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낳을 전환배치 전면화 가능성도 크다. 임금 인상 수준도 약속했던 월급제로 가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월급제로 가야 산업특근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합의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 외에 어떤 독소조항이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의 활동가들은 이 잘못된 합의안의 부결과 투쟁 건설을 위한 선동과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정동석(현대차지부 조합원)

뉴코아 파업의 쓰라린 패배에서 얻어야 할 교훈

뉴코아 파업 투쟁이 4백34일 만에 쓰라린 패배로 끝났다. 뉴코아 노조 지도부는 안타깝게도 무파업 선언을 합의하고 외주화를 사실상 인정해 줬다.

그러나 뉴코아 노조의 패배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니다.

뉴코아 파업은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악법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했고, 투쟁 초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줬다.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 준 용기있는 투쟁은 전체 노동운동에 잊지 못할 열감을 줬다.

교훈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뉴코아·이랜드 파업을 지지했다. 무엇보다 이 파업은 기업주들이 함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거나 외주화하지 못하게 제동을 걸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 투쟁의 승리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쇄적 투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검찰, 경찰, 법원이 총동원됐고, 자본가들은 이랜드 회장 박성수에게 물려서지 말라며 온갖 지원을 했다.

따라서 이 싸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도 전 계급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두 번의 매장 점거 파업은 이 투쟁을 정세의 중심으로 올려놓았고 연대의 초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승리를 낳을 정도로 강력한 연대를 조직하지 못했다.

승리의 기회를 놓친 후 결국 투쟁은 지지부진한 장기화로 이어졌다. 노조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장기투쟁에 지쳐 거의 현상으로 복귀한 상황에서 사측은 노조 간부에게 35억 원, 노동조합에 1백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런 혹독한 압박이 투쟁을 어려움으로 몰았지만, 그럼에도 뉴코아 노조 지도부의 무파업 선언과 외주화 인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금도 이랜드·기륭·KTX 등에서 투쟁의 불씨를 살리고 연대를 확산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초인적인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운송·건설 부문에서 비정규직 투쟁 승리의 소식도 들리고 있다.

촛불 향쟁이 만들어 낸 커다란 가능성 위에서 다른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려면 뉴코아 투쟁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 내야 한다.

강철구

파업을 예고한 YTN 노동자들

YTN 사장 구본홍이 47일째 노조원들의 출근 저지 투쟁에 막혀 낙하산을 제대로 퍼지도 못하자 청와대가 ‘구본홍 구하기’에 나섰다.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공기업을 통해 YTN 주식을 매각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구본홍은 9월 1일 현덕수 전 노

조 지부장과 돌발영상 팀장을 포함해 보도국 평사원 24명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강행했다. 또, 노조 활동가 72명을 징계·고소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현 정권이 결국 YTN의 민영화를 위해 구 씨에 낙하산을 씌워 불시착시켰다고

확신한다”면서 9월 2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파업 찬성이 가결되면 YTN노조는 실질적인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언론노조는 방송 장악 저지 투쟁의 시금석이 될 이 투쟁에 대한 적극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강철구



포럼에 초대합니다

대학 맑스주의 포럼

맑스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사회

정병호(다함께 운영위원)
9/10(수) 오후 6시 30분
이화여대 포스코관 461호
문의 010-2263-1106
참가비 2천 원

747 파산과 경제 위기 — 원인과 해법

정종남(다함께 활동가)
9/10(수) 오후 7시
강원대(추후 공지)
문의 010-9805-1050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최영준(다함께 활동가)
9/10(수) 오후 6시
충남대 인문대 107호
문의 010-5712-1300

핵에너지가 기후변화의 대안인가

장호중(저항의 촛불) 기자
9/11(목) 오후 7시
부산대 사회대 202호
문의 010-8367-0610

러시아·그루지야 전쟁, 신냉전이 도래하는가

조명훈(저항의 촛불) 기자
9/11(목) 오후 6시 30분
중앙대 문과대 2855호
문의 011-9875-4790
참가비 1천 원

버락 오바마 — 제국을 변화시킬 희망인가?

조명훈(저항의 촛불) 기자
9/25(목) 오후 6시 30분
고려대(추후 공지)
문의 016-546-5560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역사회포럼

서울 동대문중앙 사회포럼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정종남(다함께 활동가)
9/18(목) 오후 7시 30분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301호
문의 02-2271-2395 / 011-9987-3600
참가비 2천 원

서울 성동광진 사회포럼

오바마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9/11(목) 오후 7시 30분
여성능력개발원 3층 3강의실 (간대역 6번 출구)
문의 011-9038-0657
참가비 2천 원

경기 남부 사회포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이 도래하는가
9/23(화) 오후 7시 30분

장소 추후 공지

문의 010-6663-0032

전주 사회포럼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안 — 자유무역이 경제 위기의 대안인가
정종남 (다함께 활동가)
9/11(목) 오후 7시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 (경자장 사거리)
문의 011-9065-8806

교사 포럼

영화 상영 <교실에서 거리로> (엑시교 교원민주노조 제작)
영화상영 후 1시간자유토론
9/20(토) 오후 4시
전교조 서울지부 9층 강당 (이수역 7호선 7번 출구 승차대) 주최 다함께 교사모임
문의 02-2271-2395

신간

<소설 스파르타쿠스> (하워드 패스트, 미래인)

기원전 73년 로마에 대항한 검투사들의 반란을 다룬 소설.

로마 지배계급과 노예 사이의 계급 갈등이 잘 묘사돼 있고, 계급 사회를 철폐하려는 스파르타쿠스 군대에게서 아래로부터 반란의 전통을 볼 수 있다.

맑스는 스파르타쿠스를 “고대사에 가장 뛰어난 영웅”이라 불렀고, 로자 룩셈부르크 등은 그의 이름을 따 자신들의 조직을 스파르타쿠스단으로 짓기도 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커크 더글러스 주연의 영화 <스파르타쿠스>(1960년 작)도 추천한다.

장한빛



사노련 연행자 인터뷰

국가보안법 탄압, 공동대응으로 맞서야

8월 30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무실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양효식 편집위원** 장, **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전비연) 전 집행위원장**, **박준선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번 탄압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효식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언론·표현·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노동운동 탄압법이기도 함을 분명히 보여 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반북단체를 탄압하냐고 했는데 우리가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단체입니다.

유치장에서 촛불 운동 관련 수감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미조직 노동자였습니다. 촛불은 노동자 계급 운동의 일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노련은 미조직된 부문과 조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노련은 촛불 운동에 적극 결합했고, 단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전·선동했습니다. 사노련도 촛불의 일부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사노련 탄압에 항의하며 웹사이트에 들어와 힘내라고 응원해 줬습니다.

오민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한 일종의 타개책으로 선택한 공격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재벌을 위한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민영화, 방송사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울가미를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박준선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을 때 멀리서 구호 외치는 소리(기자회견)가 들렸습니다. 반갑고 힘이 났습니다. 지지해 주신 분들과 규탄 성명서를 내고 항의를 위해 달려오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다함께'의 대응에도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사노련의 촛불시위 참가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던데요?

양효식 수사기관은 우리가 촛불시위에서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선전·선동한 것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촛불에 색깔을 입히려고 한 것입니다. 첫 표적으로 우리가 걸렸을 뿐 앞으로 2, 3차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탄압은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박준선 촛불시위에서 배포한 간행물을 문제 삼았습니다. 촛불시위에 참가하기 시작한 이후 일거수일투족을 사진 채증

했습니다.

이메일을 압수수색했고, 사무실과 집 주변을 일상으로 감시했습니다. 저는 체포 당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고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은 휴대폰을 빼앗고 변호사 연락 요청도 묵살했습니다.

탄압에 맞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양효식 반이명박 투쟁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노련 탄압 방어 대책위 활동은 이명박 정부의 공격과 탄압에 맞선 공동대응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이 흐름을 확대해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전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민규 우리만의 대응이 아닌 공동투쟁전선을 만들어 돌파해야 합니다. 1989년 임수경이 방북했을 때 당시 정권 실세였던 박철언은 자유롭게 북한을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임수경은 4년 옥살이를 했지만, 박철언은 처벌은커녕 한동안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반정부 인사를 처벌하는 데만 사용되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없어져야 합니다.

박준선 촛불시위대가 거리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불법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시민들은 '우리가 불법이라면,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탄압 받는다면 보안법 폐



오민규



양효식



박준선

지 이유가 역설적으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김정일 체제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 체제를 우호적으로 보는 활동가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에도 반대합니다.

인터뷰 · 정리 정종남

주간
저항의 촛불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2만 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1년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resistcandle.com reader@resistcandle.com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 048402-04-014849(예금주 백은진)

전교조 대의원대회

미친 교육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다

지난 8월 30일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반(反)이명박 투쟁을 결의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법정 교원 확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과제가 많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심한 경쟁과 차별 정책을 펼친다.

귀족학교인 국제중학교를 확대해서

중학교 입시를 부활시키고, 제주도에 돈벌이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려 한다. 평준화를 해체하고 고등학교 등급화를 확실하게 하려 한다. 기존의 시험만으로도 지옥 같은 학교에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학력 평가 등 초등학교 3학년까지 포함하는 전국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교사들을 줄 세워서 평가하고 성과금을 차등 지

급하려 한다.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교사와 학생을 지옥으로 내모는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해서 전교조는 연대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현장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10월과 11월에 대규모 대중 집회를 결의했다. 전교조 대의원들은 이명박의 공격을 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결의했다.

김성보(전교조 대의원)